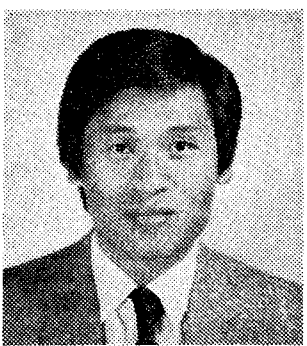


태평양에 이는 경제공동체 물결



서정석
<경정대교수·무역학>

I. 서론

21세기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성장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태평양경제협력에 있는 세계의 관심은 크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적인 생산력의 확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국가와 경제협력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경제는 우물과 같이 잘 길어 쓰면 오래가고 버려두면 못쓰게 된다. 태평양에 들어선 우물은 지금 생수라는 양이 적어 많은 빗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를 정수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태평양 국가들은 우물, 자본, 기술, 노동력의 경제협력에 가능한 지역이기에 새우물이 될 수 있다.

태평양지역협력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거론되어왔지만 아직도 각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는 없다. 우선 이기주의의 결실에 대한 회의와 대서양 통틀어 있지 못함의 한계로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선진공업 4개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개발도상 4개국(아시안제국중 인도네시아, 타일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인종, 언어 및 경제발전 단계가 달라 서로 이질적이지만, 오늘날 세계경제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고 역내의 종도도 급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 지역에서 EC와 같은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을 제외한 각종 국제자원의 수급이 가능하고,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지역 협력이 한국,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 선진제국과 아세안제국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서, 대외지향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 이에 대한 계획성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II. 태평양국가의 경제실태

전반한 태평양지역 13개국의 경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는 1981년 말, 8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구조는 선진국과 중국이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도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클라크(C. Clark)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이동과 산업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해준다. 둘째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2년간(1960~1981) 선진공업 4개국이 연평균 7.0%로서 가장 높고, 일본은 6.3%, ASEAN 4개국이 4.5%로서 비교적 낮았지만 선진국은 3% 이하를 기록했다. 1인당국민소득은 선진국이 7천7백~1만2천8백 20달러인 반면 선진공업국은 1천7백~5천2백40달러, 개도국이 5백30달러~1천8백40달러에 그쳐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째로, 생산요소와 부존상태는 미국과 일본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아 생산특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으로 일부부품에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다. 한편 선진공업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원과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차산업에 있어 수직적 분업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ASEAN제국도 열대성 1차 산품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생산과 수출은 활발하나, 낮은 기술수준과 공업적인 자본관계로 생산구조에 있어 거의 수직적 분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네째로, 경제의 대외개방도는 지난 22년간 각국 수출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수출/국내총생산)로 볼 때 싱가포르, 홍콩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높고, 대만, 한국, ASEAN제국도 비교적 높았으나 오히려 선진제국인 미국, 일본, 호주는 극히 낮다.

이와 같이 태평양지역국가들은 선진제국 사이에 자원부존상태, 산업경쟁력, 경제발전단계, 대외개방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차별, 기술, 자원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지역 협력이 한국,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 선진제국과 아세안제국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서, 대외지향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 이에 대한 계획성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II. 태평양국가의 경제실태
전반한 태평양지역 13개국의 경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는 1981년 말, 8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구조는 선진국과 중국이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도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클라크(C. Clark)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이동과 산업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해준다. 둘째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2년간(1960~1981) 선진공업 4개국이 연평균 7.0%로서 가장 높고, 일본은 6.3%, ASEAN 4개국이 4.5%로서 비교적 낮았지만 선진국은 3% 이하를 기록했다. 1인당국민소득은 선진국이 7천7백~1만2천8백 20달러인 반면 선진공업국은 1천7백~5천2백40달러, 개도국이 5백30달러~1천8백40달러에 그쳐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째로, 생산요소와 부존상태는 미국과 일본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아 생산특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으로 일부부품에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다. 한편 선진공업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원과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차산업에 있어 수직적 분업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ASEAN제국도 열대성 1차 산품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생산과 수출은 활발하나, 낮은 기술수준과 공업적인 자본관계로 생산구조에 있어 거의 수직적 분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태평양국가 사이에 경제발전단계, 부존자원의 경합상태, 경제협력의 우선순위에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세계경제와 평화 실현이라는 전제하에 성취되어야 하며 배타적인 블록기구를 형성해서는 안될 것이다

8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구조는 선진국과 중국이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도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클라크(C. Clark)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이동과 산업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해준다. 둘째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2년간(1960~1981) 선진공업 4개국이 연평균 7.0%로서 가장 높고, 일본은 6.3%, ASEAN 4개국이 4.5%로서 비교적 낮았지만 선진국은 3% 이하를 기록했다. 1인당국민소득은 선진국이 7천7백~1만2천8백 20달러인 반면 선진공업국은 1천7백~5천2백40달러, 개도국이 5백30달러~1천8백40달러에 그쳐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째로, 생산요소와 부존상태는 미국과 일본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아 생산특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으로 일부부품에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다. 한편 선진공업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원과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차산업에 있어 수직적 분업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ASEAN제국도 열대성 1차 산품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생산과 수출은 활발하나, 낮은 기술수준과 공업적인 자본관계로 생산구조에 있어 거의 수직적 분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네째로, 경제의 대외개방도는 지난 22년간 각국 수출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수출/국내총생산)로 볼 때 싱가포르, 홍콩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높고, 대만, 한국, ASEAN제국도 비교적 높았으나 오히려 선진제국인 미국, 일본, 호주는 극히 낮다.

이와 같이 태평양지역국가들은 선진제국 사이에 자원부존상태, 산업경쟁력, 경제발전단계, 대외개방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차별, 기술, 자원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III. 태평양 경제 공동체의 의미

세계도처에서 많은 나라들이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해 가며 주권공동체(EC)와 같은 경제통합체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르달(M. Myrdal)은 『경제통합이란 2개 이상의 나라가 또는 분야에서 국경을 제거하고 초월하여 단일경제권을 만들어 서로 다른나라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이라는 동일한 이상의 실현이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경제협력이나 통합의 이유는 각국 경제가 일국만으로 존속하여 발전하기가 힘들고, 각국마다 수출시장을 확보할 필요성을 느끼며, 기술은 협력되어야 하고 자원은 최적적으로 배분되어야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는 배타성(B. Balassa)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그리고 초국가동맹(Supernational union)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기하고, 마지막으 경제통합을 조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는 배타성(B. Balassa)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그리고 초국가동맹(Supernational union)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기하고, 마지막으 경제통합을 조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는 배타성(B. Balassa)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그리고 초국가동맹(Supernational union)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기하고, 마지막으 경제통합을 조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는 배타성(B. Balassa)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그리고 초국가동맹(Supernational union)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기하고, 마지막으 경제통합을 조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는 배타성(B. Balassa)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그리고 초국가동맹(Supernational union)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기하고, 마지막으 경제통합을 조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는 배타성(B. Balassa)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그리고 초국가동맹(Supernational union)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기하고, 마지막으 경제통합을 조장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창출량이 무역전환량보다 클 때 지역내 국가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회후생은 그만큼 증대된다. 또한 시토프스키(T. Scitovsky)는 대시장이론을 주장하며 회원국사이에 시장의 확대가 경쟁의 격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대규모 생산방식을 채택하여 결국 가격을 인하시켜 도타시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을 한층 격화시켜서 생산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고, 기술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제후생의 고양은 오히려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대로서 더욱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태평양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역내교역의존도가 총무역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호협력에 절실한 필요하며, 앞으로 무역진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태평양지역국가 사이에 무역의 심각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인정하여 있어서 수출 비용의 관세 부과액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 회원국간에 정책운영에 있어 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하며, 경제통합의 이익분배에 관한 제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밖에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화화, 인종, 사회적 전통이 비호환성을 지니고 있을

때문에 태평양지역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는 없다. 우선 이기주의의 결실에 대한 회의와 대서양 통틀어 있지 못함의 한계로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선진공업 4개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개발도상 4개국(아시안제국중 인도네시아, 타일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인종, 언어 및 경제발전 단계가 달라 서로 이질적이지만, 오늘날 세계경제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고 역내의 종도도 급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 지역에서 EC와 같은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을 제외한 각종 국제자원의 수급이 가능하고,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지역 협력이 한국,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 선진제국과 아세안제국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서, 대외지향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 이에 대한 계획성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II. 태평양국가의 경제실태
전반한 태평양지역 13개국의 경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는 1981년 말, 8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구조는 선진국과 중국이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도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클라크(C. Clark)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이동과 산업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해준다. 둘째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2년간(1960~1981) 선진공업 4개국이 연평균 7.0%로서 가장 높고, 일본은 6.3%, ASEAN 4개국이 4.5%로서 비교적 낮았지만 선진국은 3% 이하를 기록했다. 1인당국민소득은 선진국이 7천7백~1만2천8백 20달러인 반면 선진공업국은 1천7백~5천2백40달러, 개도국이 5백30달러~1천8백40달러에 그쳐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째로, 생산요소와 부존상태는 미국과 일본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아 생산특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으로 일부부품에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다. 한편 선진공업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원과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차산업에 있어 수직적 분업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ASEAN제국도 열대성 1차 산품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생산과 수출은 활발하나, 낮은 기술수준과 공업적인 자본관계로 생산구조에 있어 거의 수직적 분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IV. 태평양 경제 공동체 결성의 필요성

오늘날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각국 경제여건은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역내 국가사이에 상호의존도가 높고 최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열어 생산력과 무역의 외생적·내생적 발전을 기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 국가들은 지역경제협력에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첫째, 태평양지역국가는 1981년말 세계 총무역 중에서 차지한 비중이 약 30%이고 상호의존도도 약 40%나 되어 어느 지역통합체보다 이지역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태평양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역내교역의존도가 총무역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호협력에 절실한 필요하며, 앞으로 무역진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태평양지역국가 사이에 무역의 심각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인정하여 있어서 수출 비용의 관세 부과액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 회원국간에 정책운영에 있어 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하며, 경제통합의 이익분배에 관한 제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밖에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화화, 인종, 사회적 전통이 비호환성을 지니고 있을

때문에 태평양지역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는 없다. 우선 이기주의의 결실에 대한 회의와 대서양 통틀어 있지 못함의 한계로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선진공업 4개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개발도상 4개국(아시안제국중 인도네시아, 타일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인종, 언어 및 경제발전 단계가 달라 서로 이질적이지만, 오늘날 세계경제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고 역내의 종도도 급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 지역에서 EC와 같은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을 제외한 각종 국제자원의 수급이 가능하고,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지역 협력이 한국,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 선진제국과 아세안제국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서, 대외지향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 이에 대한 계획성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II. 태평양국가의 경제실태
전반한 태평양지역 13개국의 경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는 1981년 말, 8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구조는 선진국과 중국이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도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클라크(C. Clark)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이동과 산업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해준다. 둘째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2년간(1960~1981) 선진공업 4개국이 연평균 7.0%로서 가장 높고, 일본은 6.3%, ASEAN 4개국이 4.5%로서 비교적 낮았지만 선진국은 3% 이하를 기록했다. 1인당국민소득은 선진국이 7천7백~1만2천8백 20달러인 반면 선진공업국은 1천7백~5천2백40달러, 개도국이 5백30달러~1천8백40달러에 그쳐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무역창출량이 무역전환량보다 클 때 지역내 국가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회후생은 그만큼 증대된다. 또한 시토프스키(T. Scitovsky)는 대시장이론을 주장하며 회원국사이에 시장의 확대가 경쟁의 격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대규모 생산방식을 채택하여 결국 가격을 인하시켜 도타시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을 한층 격화시켜서 생산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고, 기술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제후생의 고양은 오히려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대로서 더욱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태평양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역내교역의존도가 총무역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호협력에 절실한 필요하며, 앞으로 무역진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둘째, 태평양지역국가 사이에 무역의 심각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인정하여 있어서 수출 비용의 관세 부과액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 회원국간에 정책운영에 있어 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하며, 경제통합의 이익분배에 관한 제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밖에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화화, 인종, 사회적 전통이 비호환성을 지니고 있을

때문에 태평양지역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는 없다. 우선 이기주의의 결실에 대한 회의와 대서양 통틀어 있지 못함의 한계로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선진공업 4개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개발도상 4개국(아시안제국중 인도네시아, 타일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인종, 언어 및 경제발전 단계가 달라 서로 이질적이지만, 오늘날 세계경제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고 역내의 종도도 급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 지역에서 EC와 같은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을 제외한 각종 국제자원의 수급이 가능하고,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지역 협력이 한국,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 선진제국과 아세안제국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서, 대외지향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 이에 대한 계획성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II. 태평양국가의 경제실태
전반한 태평양지역 13개국의 경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는 1981년 말, 8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구조는 선진국과 중국이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도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클라크(C. Clark)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이동과 산업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해준다. 둘째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2년간(1960~1981) 선진공업 4개국이 연평균 7.0%로서 가장 높고, 일본은 6.3%, ASEAN 4개국이 4.5%로서 비교적 낮았지만 선진국은 3% 이하를 기록했다. 1인당국민소득은 선진국이 7천7백~1만2천8백 20달러인 반면 선진공업국은 1천7백~5천2백40달러, 개도국이 5백30달러~1천8백40달러에 그쳐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째로, 생산요소와 부존상태는 미국과 일본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아 생산특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으로 일부부품에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다. 한편 선진공업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원과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차산업에 있어 수직적 분업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ASEAN제국도 열대성 1차 산품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생산과 수출은 활발하나, 낮은 기술수준과 공업적인 자본관계로 생산구조에 있어 거의 수직적 분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V. 문제점과 방향

카너트(K. Kanert)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의 조건을 첫째, 회원국의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하고 관세 및 기타 제한조치가 철폐되더라도 각국에 기존 국내산업이 생존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지역적으로 인정하여 있어서 수출 비용의 관세 부과액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 회원국간에 정책운영에 있어 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하며, 경제통합의 이익분배에 관한 제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밖에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화화, 인종, 사회적 전통이 비호환성을 지니고 있을

때문에 태평양지역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는 없다. 우선 이기주의의 결실에 대한 회의와 대서양 통틀어 있지 못함의 한계로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선진공업 4개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개발도상 4개국(아시안제국중 인도네시아, 타일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인종, 언어 및 경제발전 단계가 달라 서로 이질적이지만, 오늘날 세계경제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고 역내의 종도도 급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 지역에서 EC와 같은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을 제외한 각종 국제자원의 수급이 가능하고,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지역 협력이 한국,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 선진제국과 아세안제국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서, 대외지향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 이에 대한 계획성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II. 태평양국가의 경제실태
전반한 태평양지역 13개국의 경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는 1981년 말, 8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구조는 선진국과 중국이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도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클라크(C. Clark)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이동과 산업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해준다. 둘째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2년간(1960~1981) 선진공업 4개국이 연평균 7.0%로서 가장 높고, 일본은 6.3%, ASEAN 4개국이 4.5%로서 비교적 낮았지만 선진국은 3% 이하를 기록했다. 1인당국민소득은 선진국이 7천7백~1만2천8백 20달러인 반면 선진공업국은 1천7백~5천2백40달러, 개도국이 5백30달러~1천8백40달러에 그쳐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째로, 생산요소와 부존상태는 미국과 일본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아 생산특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으로 일부부품에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다. 한편 선진공업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원과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차산업에 있어 수직적 분업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ASEAN제국도 열대성 1차 산품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생산과 수출은 활발하나, 낮은 기술수준과 공업적인 자본관계로 생산구조에 있어 거의 수직적 분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네째로, 경제의 대외개방도는 지난 22년간 각국 수출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수출/국내총생산)로 볼 때 싱가포르, 홍콩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높고, 대만, 한국, ASEAN제국도 비교적 높았으나 오히려 선진제국인 미국, 일본, 호주는 극히 낮다.

이와 같이 태평양지역국가들은 선진제국 사이에 자원부존상태, 산업경쟁력, 경제발전단계, 대외개방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차별, 기술, 자원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지역 협력이 한국,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 선진제국과 아세안제국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서, 대외지향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 이에 대한 계획성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ASEAN제국사이에 무역 경쟁은 심각하다.

선진제국과 NICs는 중공업제품의 수출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한편 NICs 아시안제국과 함께 격심한 수출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태평양국가들이 자유 무역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이상정착을 수립해 간다면 효과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밖에 선·후진국사이에 지역경제를 기하여 기술이전 및 협력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남북問題의 심각성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내의 상호협력적인 경제지원을 증진시킬 수 있다.

V. 문제점과 방향

카너트(K. Kanert)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제통합의 조건을 첫째, 회원국의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하고 관세 및 기타 제한조치가 철폐되더라도 각국에 기존 국내산업이 생존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지역적으로 인정하여 있어서 수출 비용의 관세 부과액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세계, 회원국간에 정책운영에 있어 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하며, 경제통합의 이익분배에 관한 제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밖에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화화, 인종, 사회적 전통이 비호환성을 지니고 있을

때문에 태평양지역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는 없다. 우선 이기주의의 결실에 대한 회의와 대서양 통틀어 있지 못함의 한계로 선진 5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선진공업 4개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개발도상 4개국(아시안제국중 인도네시아, 타일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은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인종, 언어 및 경제발전 단계가 달라 서로 이질적이지만, 오늘날 세계경제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크고 역내의 종도도 급격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만약 이 지역에서 EC와 같은 경제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을 제외한 각종 국제자원의 수급이 가능하고,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지역 협력이 한국,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 선진제국과 아세안제국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서, 대외지향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 이에 대한 계획성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II. 태평양국가의 경제실태
전반한 태평양지역 13개국의 경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는 1981년 말, 8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구조는 선진국과 중국이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도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클라크(C. Clark)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이동과 산업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해준다. 둘째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2년간(1960~1981) 선진공업 4개국이 연평균 7.0%로서 가장 높고, 일본은 6.3%, ASEAN 4개국이 4.5%로서 비교적 낮았지만 선진국은 3% 이하를 기록했다. 1인당국민소득은 선진국이 7천7백~1만2천8백 20달러인 반면 선진공업국은 1천7백~5천2백40달러, 개도국이 5백30달러~1천8백40달러에 그쳐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째로, 생산요소와 부존상태는 미국과 일본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아 생산특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으로 일부부품에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다. 한편 선진공업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원과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차산업에 있어 수직적 분업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ASEAN제국도 열대성 1차 산품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생산과 수출은 활발하나, 낮은 기술수준과 공업적인 자본관계로 생산구조에 있어 거의 수직적 분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네째로, 경제의 대외개방도는 지난 22년간 각국 수출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수출/국내총생산)로 볼 때 싱가포르, 홍콩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높고, 대만, 한국, ASEAN제국도 비교적 높았으나 오히려 선진제국인 미국, 일본, 호주는 극히 낮다.

이와 같이 태평양지역국가들은 선진제국 사이에 자원부존상태, 산업경쟁력, 경제발전단계, 대외개방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차별, 기술, 자원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지역 협력이 한국,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 선진제국과 아세안제국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서, 대외지향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 이에 대한 계획성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II. 태평양국가의 경제실태
전반한 태평양지역 13개국의 경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는 1981년 말, 8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구조는 선진국과 중국이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도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클라크(C. Clark)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이동과 산업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해준다. 둘째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2년간(1960~1981) 선진공업 4개국이 연평균 7.0%로서 가장 높고, 일본은 6.3%, ASEAN 4개국이 4.5%로서 비교적 낮았지만 선진국은 3% 이하를 기록했다. 1인당국민소득은 선진국이 7천7백~1만2천8백 20달러인 반면 선진공업국은 1천7백~5천2백40달러, 개도국이 5백30달러~1천8백40달러에 그쳐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째로, 생산요소와 부존상태는 미국과 일본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아 생산특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으로 일부부품에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다. 한편 선진공업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원과 자본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차산업에 있어 수직적 분업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ASEAN제국도 열대성 1차 산품 및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생산과 수출은 활발하나, 낮은 기술수준과 공업적인 자본관계로 생산구조에 있어 거의 수직적 분업을 면치 못하고 있다.

네째로, 경제의 대외개방도는 지난 22년간 각국 수출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수출/국내총생산)로 볼 때 싱가포르, 홍콩이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높고, 대만, 한국, ASEAN제국도 비교적 높았으나 오히려 선진제국인 미국, 일본, 호주는 극히 낮다.

이와 같이 태평양지역국가들은 선진제국 사이에 자원부존상태, 산업경쟁력, 경제발전단계, 대외개방도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호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무역차별, 기술, 자원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자본과 기술 및 무역에 있어 발전가능성은 크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한 태평양지역 협력이 한국, 대만, 홍콩을 제외하고 선진제국과 아세안제국 사이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에서, 대외지향성이 높은 한국으로서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제도 이에 대한 계획성있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II. 태평양국가의 경제실태
전반한 태평양지역 13개국의 경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구는 1981년 말, 8억으로 전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취업구조는 선진국과 중국이 2, 3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면 개도국은 1차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클라크(C. Clark)가 말하는 경제성장률에 따른 노동력구조의 이동과 산업별 소득수준의 변화를 잘 반영해준다. 둘째로, 경제성장률은 지난 22년간(1960~1981) 선진공업 4개국이 연평균 7.0%로서 가장 높고, 일본은 6.3%, ASEAN 4개국이 4.5%로서 비교적 낮았지만 선진국은 3% 이하를 기록했다. 1인당국민소득은 선진국이 7천7백~1만2천8백 20달러인 반면 선진공업국은 1천7백~5천2백40달러, 개도국이 5백30달러~1천8백40달러에 그쳐 소득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째로, 생산요소와 부존상태는 미국과 일본이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수준이 높아 생산특화에 의한 수평적 분업이 가능하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으로 일부부품에서 수평적 분